

한국 유기비료신문

Korean Organic Fertilizer Newspaper

제117호 2019년 11월 25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발행

www.kofic92.or.kr / Tel 042) 826-3920 / 창간 2008년 10월 10일 / 월간

'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유기질비료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폐지

품질검사성적서 통보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조항 삭제로 인해 사실상 지자체들의 관내 비료 생산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단위 자원 순환 촉진, 비료업체간 과잉경쟁, 운영비 감소 등을 위하여 해당 시·군 또는 도 단위 권역 내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우대지원을 허용했다.

그동안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금지' 조항은 지자체의 관내 생산 퇴비에 대한 지방비 추가보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2011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조건으로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돼 왔다.

하지만 효과적인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지역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 지방비를 우대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자체, 축

산단체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사)농어업정책포럼에서는 지자체가 관내 퇴비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내 퇴비의 지역내 순환이 어려워 지므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환원하는 경축순환농업 도입에 장애가 조성되어 농촌환경의 악취 및 수질오염이 유발된다면서 지역업체에 대한 이익 여부보다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과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조항 삭제를 2018년부터 정책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농식품부는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금지' 조항 문구 삭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결과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내 가축분뇨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정책상 정당한 목적이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관내 축산 분뇨의 신속한 처리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가 정책상 잘 실행하려면 지자체에서는 비료 유통·품질 점검 등 토양환경과 비료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한편 품질검사성적서 통보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비료품질검사 1차 부적합 판정된 비료에 대해 통보 후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하면 재검사 통보가 2개월 소요됨으로써 최종 결과가 적함으로 판정된 업체는 2개월 이상 농업인에게 비료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품질검사결과 통보기간을 단축하여 농업인 비료공급 차질을 방지하고, 공급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기재

조류인플루엔자 8대 취약대상 방역관리 강화

현장점검과 소독 지원 등 방역관리 강화

축산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달보다 증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 조사결과(2019.11월),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는 지난달(2019.10월, 611천수) 대비 15% 증가한 705천수로 확인되었고,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8대 취약대상'은 ①철새도래지(96개소), ②전통시장(가금판매소 329개소), ③거래상인(계류장 239개소), ④식용란선별포장업(93개소), ⑤밀집단지(10개소), ⑥소규모농가(2123호), ⑦고령농가(156호), ⑧가든형식당(425개소)이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철새가 많은 곳,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곳,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국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위험시기에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 농가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5~10m 길이)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PR]

시험 사용 50% DC

겨울철에도 변함없는 효과

악취 토탈 솔루션

원료 혼합 발효장 분무 탈취기 투입 시비 후 살포

뉴트로 에어리페어 + FS 골드

한돈협회 검증사업 1등 악취저감제 알카리성 악취 제거 산성 악취 제거

겨울철에도 변함없는 효과! 악취물질을 직접 잡아 없애기 때문에 사용 즉시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원료 도입부터 발효 과정은 물론 탈취기나 시비 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없앱니다.

전화번호만 남겨도 혜택이 팡팡!!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31-609-2142

10,000원

우린네이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풀림아이원 B-1017 www.woorin.info www.악취제거제.com 악취, 가스, 민원 맞춤 해결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지자체 등 교육 및 농가조사 등 추진



▲ 농식품부는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 시행에 대비하여 시도·시군 등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를 통한 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등을 위해 내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에 대비하여, 시도·시군 등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 및 상담(컨설팅) 방법 등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자체(시도·시군) 및 농축

협 등 퇴비 부숙도 담당자는 금번 교육을 받은 이후 11월 하순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도 및 시군,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

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11월말까지 접수하고 있고,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돼지 50㎡·가금 200㎡ 이상)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가내 퇴비의 부숙도 검사와 퇴비 부숙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군을 통해 11월 22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퇴비사 및 퇴비 교반장비 보유상황, 퇴비 관리상황,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애로사항 등 퇴비 부숙도 관련 현안 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농축협 담당자 교육과 농가조사 등을 토대로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축산 농가들도 축산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혜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

농촌환경 개선, 축산 암모니아 저감,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시행

지난 11월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여 2차례(11월~12월, 2월~3월)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주말과 일출 전, 일몰 후 산림주변 등 불법소각 집중단속(시군별 2개반 이상)을 강화하여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① 농가 퇴비부숙도 지도·점검(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퇴비 부숙도 관리반 구성),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③ 미생물제제 가축분뇨 살포 및 미생물제제 가축 급여, ④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⑤ 축사 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돈사 현대화 등 축산과 경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림)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PR]

감귤원 토양 양분 과다비율 증가, 비료사용 기준 지켜야

인산 25.5 → 34.0%, 칼륨 22.5 → 29.0%로 증가



토양 중에 인산 함량의 경우 적정은 2002년 26.5%에서 2018년 23.0%로 감소한 반면, 과다는 25.5%에서 34.0%로 증가했고 칼륨의 경우 적정은 2002년 29.5%에서

2018년도 감귤원 토양화학성 변동 조사 결과 인산, 칼륨 등은 적정함량 보다 과다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2년부터 체계적인 감귤원 토양관리와 지속적인 농업환경 유지·보존을 위해 도내 감귤원 200필지를 지정 4년 주기로 토양화학성 변동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차별로 비교하면 2002년도에 비해 2018년도 평균 pH는 4.9에서 5.2, 칼슘은 2.8에서 5.1cmol/kg, 마그네슘은 1.0에서 1.5cmol/kg로 높아져 전체적으로는 토양이 개량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34.5%로 증가, 과다비율 또한 2002년 22.5%에서 2018년 2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원 토양 속에 인산함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붕소 결핍이 일어나고 칼륨이 많아지면 필요 이상으로 칼륨을 흡수하게 되어 산함량이 높아지는 등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대천 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농업 육성과 지하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농가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통해 시비처방에 따라 비료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R]

농약안전관리 전문가 모여 농산물 수출 힘 심는다

농촌진흥청, 26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및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 Import

은 9,300만 달러로 2017년 보다 1.6% 늘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등 신선 농산물이 16.5% 증가해 농가소득

Tolerance) 설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이 26일 대전에서 열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우리 농산물에서 대상국 기준에 맞지 않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출농산물의 농약안전사용지침 등 농약 안전 사용 기술 개발과 수출국 IT 설정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수출 농가 안전성 기술 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PR]

[3면으로 이어짐]

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①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사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모든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처분업체에서만 소각 처리가 가능하며,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 특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예〉 위·수탁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실제 행정청이 대집행에 착수하는 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왔다.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종전에 행정질서법(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던 불법 폐기물 관련 법률 위반사항 중 일부를 벌칙(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했다.

〈예〉 ① 법령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R]

[2면 ‘농약안전관리 전문가 모여 농산물 수출 힘 싣는다’에 이어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대한만의 전문가들과 수출농산물의 농약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험을 수행하고 공동 협력의 발판을 갖추고자 마련했다.

1일차에는 ‘국내 농산물 수출 지원 동향 및 각 나라

별 IT 설정 방법’을 주제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국내 정책 방향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농약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동향 △한국의 PLS 시스템 소개 및 설정 방법 규정 △대만의 IT 설정 방법과 규정 △일본의 IT 설정 방법과 규정 △미국

수출농산물의 IT 설정 사례 등이 발표된다.

2일차에는 ‘농촌진흥청의 IT 설정 연구 추진을 위한 국가별 잔류 시험 방법’을 주제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IT 설정 연구 소개 △배추, 파프리카, 딸기 등 대만 수출용 농산물 IT 설정 연구 △단감, 인삼 등 미국 수출용

농산물 IT 설정 연구 등 국가별 IT 설정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병석 화학물질안전과장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 정부 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의 높은 농약안전관리 수준을 알려 대만,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IT 신규 설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수출 통관 중 부적합한 농산물이나 농약이 대상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잔류시험을 진행 및 농가 대상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과 상담 등 다양한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2020년 농정예산 8,408억원 편성, 농민기본소득 준비예산 확보

2020년 농정·해양 분야 예산 8,408억원 편성

‘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 확보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환경 공동체 지원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난 590억원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 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80억 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 원까지 확

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흠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축사 악취는 경기도 악취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경기도의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

경북도, ‘축산업 신뢰 회복’ 위한 결의문 발표

가축질병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뢰 하락·이미지 훼손도 심각

철저한 방역·깨끗한 생산 등 생산자단체가 국민에 약속

경북도 축산단체연합회는 19일 도청에서 ‘축산업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약속 결의문’을 발표했다.

금번 결의문 발표는 축산단체가 자발적으로 대국민 약속 결의문을 채택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앙단위 축산단체연합회 명의의 대국민약속 결의 발표와 함께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축산단체는 최근 가축질병(ASF),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농경지 및 하천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사태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언론 이슈 확산에 따른 축산업에 대한 신뢰 하락 및 이미지 훼손에 우려를 표했다.

대국민 약속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축산단체 스스로 가축질병,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 등 자정 노력과 이를 통한 축산업 이미지 쇄신부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삼주 경상북도 축산단체연합회장(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최근 우리 축산업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어 우리가 생산한 축산물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며 “이에 대해 우리 축산농가가 스스로 청결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우리 축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축산농가의 문제점과 애로사항도 확인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PR]

전남도, 농업환경보전사업 4곳 전국 최다 선정

마을 주민 열정 높은 순천담양강진장성 4곳에 5년간 최대 6억5천만 원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20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전국 20개소 중 4개소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토양수질환경 개선 등 농업생산 환경보전 활동과 경관 개선,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활동 등에 주민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 사업으로 반영됐다.

전남지역 선정 마을은 순천 공각, 담양 청촌, 강진 안풍, 장성 생촌마을이다. 앞으로 5년간 최대 6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농업환경 보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 1차년에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주민·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연차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2~5년 차에는 1년차에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비료 투입 저감, 농업용수 수질 개선 활동 등 농업환경 보전활동, 마을의 농업문화유산 보존,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함평 백년마을의 경우 농업환경보전 활동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사업 시작 전인 2017년 친환경 인증 면적이 16.8ha였으나, 올해 45ha로 무려 2.6배나 늘었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마을 주민의 높은 참여의식으로 농배수로 정비, 마을환경 정비, 영농폐기물 수거 등 공동활동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유기농생태마을과 연계 육성할 계획이다.

유동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통해 생태계 보전, 농촌경관 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의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지속적인 토양농업용수 개선활동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촌 경관문화유산 등의 보존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R]

전북도, 2020년 삼락농정 예산(안), 1조 452억원 편성

전국 최초 농민 공익수당 지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삼락농정 정책적 진화

청년창업농 비빌언덕 마련

전북도가 2020년에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농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고, 삼락농정의 정책적 진화를 통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청년농업인 정책, 농촌복지정책 등 농업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안)은, 1조 452억원으로 전년도 농림해양수산 예산액 9,517억원 대비 935억원(9.8%)이 증가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특색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라북도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 613억원(도비 245, 시군비 368)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한, 2020년부터는 생산물량이 과잉되어 산지폐기 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농가들에게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액을 2019년 10억원에서 48억원(도비 14, 시군비 34)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고령화 및 청년농업인 급감으로 농촌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정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비빌언덕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영농정착금·정책자금·영농기반·주거환경 등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 4개 사업에 11.3억원(도비 2.4, 시군비 5.4, 자담 3.5)을 신규로 편성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인 고령화와 오랜 농사일로 다양한 농부증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 접근성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을 위해 66억원(도비 33, 시군비 33)이 신규로 편성되어 농업인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PR]

아주까리유박 리신 관리 기준 검토 필요

유기질비료 원료인 아주까리유박의 리신성분 분석법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아주까리유박에 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되어 이를 함유한 유박비료를 먹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폐사했다는 주장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아주까리유박 함유비료에 대해 유럽의 사료 중 리신 기준을 적용하여 10mg/kg이하로 기준을 설정했다.('17.9.18.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고시' 8.4.1.시행)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외국의 경우 아주까리유박 리신 규제에 대해 일본, 대만, 중국, 미국, 이태리, 브라질, EU 등 30여국 비료 사용국가 중 리신 규제 사례는 없다. 또한 EU에서도 비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만 리신함량을 10mg/kg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 사료관리법에서는 아주까리유박은 원료로만 지정됐고 리신 규제 기준은 없다”면서 아주까리유박 리신 성분에 대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재검토를 성토했고 있다.

1. 리신 단백질 정량 시험법의 재현성 문제

아주까리유박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리신은 단백질의 형태로 되어있어, 시료채취, 보관, 분석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재현성의 문제가 되는 유해성분이다. 국내에서 아주까리유박을 가장 많이 수입, 공급하고 있는 (주)NH농협무역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한 최근 3년간의 검사내역을 보면, 리신의 분석결과 약 1,410%이상의 편차가 발생했고, 업체에서 동일시기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한 분석결과도 500%이상의 편차가 발생했다. 완제품의 경우 아주까리유박이 많이 투입된 제품은 기준치 적합관정을 받았고, 오히려 적은 양이 투입된 제품은 기준치 초과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주까리유박 및 함유제품 리신(ricin) 분석 결과(5개 업체)

(단위:mg/kg)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비고
아주까리유박(원료)	164.8	51.4	1.4	20미만	10미만	아주까리유박 원료비중 60%이상
제품	25.4	33.6	4.6	10미만	-	
분석년월	'17.9	'17.11	'18.2	'18.2	'18.2	
분석기간	18일	20일	20일	20일	20일	

위의 분석결과를 보면 원료인 아주까리유박과 아주까리유박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리신 분석결과에 있어 연관성이 보이지 않으며 특히, 아주까리유박은 국내 대부분 업체들이 동일한 거래선(인도산, 농협무역)

에서 구매한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별로 원료에 대한 분석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료 보관 및 채취 시점과 상태에 따라서는 물론 분석기관의 분석에도 안정화가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리신 공정규격 시행의 문제점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비료 공정규격 중 리신 유해성분은 한국친환경농지재협회와 많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되었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시행을 유예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적용되지 않았다. 시행전 아주까리유박과 완제품에 대한 조사를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유통중인 유박비료 8점만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시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3. 분석기관의 신뢰성

비료 공정규격에 지정되어있는 모든 성분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리신 성분분석이 가능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유일하고 분석전문가도 1인에 그쳐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검사기간 최소 3주가 소요되고, 상호검증 및 확인이 불가능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원료수입시는 물론 제품 생산시 모집단마다 분석을 맡기고 있다. 대형업체는 검사비용이 수 천만원이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도 크다. 분석기관 1개 독점으로 분석비용이 1점당 60만원에 달해 1독점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리는 실정이다.

4. 수입되는 아주까리유박의 리신규제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아주까리유박의 경우 (주)NH농협무역(60% 이상점유) 및 기타 수입업체에서 비료로 수입이 되고 있으면서도, 리신규정은 제외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초기 수입되는 과정에서부터 리신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먼저이며, 기준치 이내의 아주까리유박만이 수입된다는 가정 하에 리신 단속이 시행되어야 한다.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용역결과만의 분석법 설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 안전성 연구와 같이 적어도 3년간 3개이상 전문기관 공동 연구결과에 의하여 기준치가 정해져야 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장비 및 분석요원 양성 후 전수조사를 통해 재설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김은혜 기자]

제주도, 농민들을 위한 농업 지원책 확대해 나갈 것

11월 11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 김용범 도의회 부의장, 고용호 도의회 농수축위 원장, 양운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농업 유관기관 단체장 및 도농업인 단체협의회 23개 농업인단체 회원 1,500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최근 제주농업은 빈번한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농산물 가격안정,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여러 지원책들을 더욱 확대해 “농민들이 땀 흘린 만큼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자랑하는 청정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을 살려 1차 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지켜갈 것”이라며 ▲제주산 농산물의 민감 품목 포함 ▲정부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한 제주형 직불제 시행 ▲제주형 공공급식센터 설립 ▲청년·후계농 육성 ▲농업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 실현 및 농업인단체와 관련기관과의 소통 및 농업농촌활력화에 기여하고자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식전행사를 비롯해 2019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시상 등 시상식과 제주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식 등의 홍보 행사도 운영됐다. [PR]

충북도, 벼 익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품종 및 재배시기 기후변화에 따라 바뀌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기후 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충북지역의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벼 재배지대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과 적정 재배시기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재배지대는 청주·충주를 중심으로 중부평야지, 제천·단양의 중북부중산간지 그리고 보은을 중심으로 남부중간지로 다양하다.

벼꽃이 피는 출수시기부터 40일간 21~22℃의 평균기온이 유지되어야 등숙(벼 알곡이 차는 것)이 가장 잘 된다. 이러한 환경조건은 완전미가 많아지고 밥맛을 좋게 한다.

그러나 최근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지난 1981년부터 30년과 최근 5년을 비교해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는 1.2℃, 제천은 0.6℃, 보은은 0.9℃가 각각 상

승했으며, 월별로는 최대 1.1~1.7℃가 상승했다.

30년 전에는 안정적으로 벼를 생산할 수 있는 출수한계기가 청주지역은 8월 23일, 제천은 8월 5일이었으나 현재 청주는 8월 28일, 제천은 8월 15일, 보은은 8월 20일로 각각 늦춰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생종을 주로 재배하던 제천지역에서도 중생종이 안정적으로 재배될 수 있고, 내륙지역의 중·만생종은 재배시기가 늦춰져야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농업기술원 이채영 연구사는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며 “우리 지역에 맞도록 벼 재배시기를 조절하며 우량 품종을 선택해야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PR]

겨울철 한우 사육 단계별 관리 방법

송아지는 배를 따뜻하게, 육성우는 습도 조절로 버짐 예방



보온등이 설치된 우사

한우는 사육단계에 따라 송아지, 육성우, 비육우로 나뉘고, 시기별 사육 환경의 일, 수온차이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아지는 체온 유지와 설사 예방을 위한 환경온도에 신경 써야 한다.

비가 온 바깥에 바로 있지 않도록 나무판이나 천조, 짚을 깔아주고, 젖어있지 않게 시루 길아 준다.

송아지가 한 수 있도록 8.8제곱미터(㎡)가량의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을 더할 수 있도록 보온장도 달아 준다. 따뜻한 물을 끓여서 대야에 담아 놓아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공차가 한 알 또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폐비하 방광사를 입혀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육성우의 경우, 우생(牛生)과 습도가 높으면 호흡기 질환이나 음낭이식 피루한 버짐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깃털을 짧아지거나 떨어져 붙는것이 조건 지름을 깨뜨리면 습도가 높으므로 하가 내린 지름을 얇아 주기 한다. 소작에 이상이 없으면 환풍기를 끈다.

12개월령 미만이면 햇빛이 잘 드는 우유생산에 좋고 비타민A 체제를 보충해 준다. 버짐이 생기면 초기에 인공를 사용하 치료하고, 기침이 심하거나 젖꼭지가 많이 내린 즉시 항생제 투여로 치료한다.

비육우는 큰 먹는 일이 주는 겨울철에는 체온과

구기(呼吸) 능력이 높아지므로 온도를 충분히 낮추하여 육식성을 개발할 수 있다.

환풍을 입수시킬 종파 방향을 위한 온도에 신경 써야 하며, 한 기온(氣溫) 미지은 한 권 30.3(℃) 이상 기질 수 있도록 한다.

육식성 개발을 위해 15개월령 개체가 1년 시분정가량을 입피암모늄을 한 기온 하루 20g가량을 한 알에 내온 정도 사육에 되어 준다.

육식성 증상을 보인다면 하루 20g가량을 12개월령 수준에 맞춘다. 더, 입피암모늄을 물에 8개월 전에는 육식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은 "겨울철에 소에게 맞는 깃털의 입전성 확인도 중요하다. 음낭이 많이 된 불사료를 먹은 암소의 젖꼭지 송아지가 먹으면 음낭이 작아지고, 그러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PR]

겨울철 필수 돈사 관리

주변 울타리 살피고 소독 장비 얼지 않게 관리해야

최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겨울철 일꾼농가의 차단 방역에 사육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구제역(口蹄疫)과 돼지유행성열병(PRS) 등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차량을 소독하기 기록을 전사하고, 주기적으로 돈사 일주를 소독해야 한다.

차량·사람의 동선에 돼지의 이동통로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돈사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장화 끈을 잘라 신어 코치우의를 입는다.

돈사 주변 울타리 주변을 점검하고, 구제역을 통해 돈사 농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주의한다.



보온등 커진 돈사

돼지의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암컷의 발 온도는 20.5(℃)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어미 우체에서 낳아 낸 암컷의 온도를 측정해 길은 우체 안에서 2.8도 이상, 인 8.8도 이상 차이가 나면, 난임 시일을 점검한다.

암컷이 농 유희가수 수치가 높아지면 사육하는 일이 쉽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상대습도는 50~60% 정도가 적당하다.

예방대응을 시기에 맞게 점검하며, 수시로 돼지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국호 일꾼농장은 "전사한 차단방역에 지속한 사육단계는 일꾼농가가 지구의 어둠을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R]



돈사 소독 모습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 중간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 49호 과태료 처분

농원화산식물주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종축(種畜)인 돼지(2.8%)에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 일일농가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 조치를 했다.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사육지 백신접종을 유

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0%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 [PR]

농식품부, 2019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마다 지역에서 환경·사회·농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유산 중에서도 보존하여 전승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8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한우 생산 전통 농업시스템'을 겨울철 생산량 증진을 위해 고을을 활용한 지방시스템 농업 원

지까지 유지 전승하고 있는 축,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고령 하인지역 농민 농가시스템'을 하인지역 특산물 생산에 필요한 과소량의 수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민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축,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상수 전통 밭농업'은 감 지베 및 밭 채소를 위한 감나무 접목기술 전승을 통해 '상수농사' 고유 농업을 오랫동안

유전 이어온 역사상으로 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농식품부 조지호 농촌정책 국장은 "농업유산을 지구가 남긴 기일에 기여하는 전통하는 시산이다. 단순히 보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산의 가치를 국민들에 공유하는 동시에 전통시스템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R]

머리색은 짙은 발리 그만두머리

머리색은 짙을 계속해서 팔고 나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큰 실수로 어떤 의미를 진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자신의 의지력을 입증해 준다고 생각한다. 속으로는 잘못을 후회하면서도 걸으려는 변명한다.

처음에 그들이 실수했을 때는 부주의한 사람으로 취급되지만, 나중에는 머리색은 사람이 되고 만다. 경솔한 약속도, 그릇된 결심도, 모두 구속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머리색은 짙을 계속해서 팔고 나간다. 그리고 변함없이 머리색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상을 읽는 지혜 발명]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

11월 15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배출 감축 훈련
환경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미세먼지 현장점검 실시



모의훈련 알림 현수막 설치 현황

환경부는 11월 15일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인 12월에서 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훈련을 계기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

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됐다.

모의훈련은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주의' 경보는 ①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mu\text{g}/\text{m}^3$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 경보가 이를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도 기존 '관심' 단계에 따른 조치보다 공공부문 감축이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모의훈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됐다.

울 겨울의 경우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위기경보 발령

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량을 조정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관급공사장도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제한된다. [PR]

폐비생산업체 이행사항

- 폐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폐비원료 및 완제품에 바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폐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폐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중단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11.18~12.13일까지 방치된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 최대 150만 원 상금 지급



산지·오지 지역에서 수거된 영농폐비닐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

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 톤에서 2020년 20만 1,000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함께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11월 18일부터 한달간 추진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기존 체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 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PR]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 제고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될 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인 준비상황으로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이다.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

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9.11~'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도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했다.

[김은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KOFIC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Korea Organic Fertilizer Industry Cooperative

농협

2020 정부지원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9. 11. 5. ~ 12. 4.(30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2020년 유기질비료 신청안내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혜택(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100원	1,100원	1,000원	800원
	지방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1,7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8,000원일 경우		4,000원일 경우	3,600원일 경우	3,300원일 경우
	↓		↓	↓	↓
		6,300원	2,300원	2,000원	1,900원

※ 지방비는 600원/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2020년 토양개량제 변경·추가신청 안내

- **신청대상** 2019년 2월~5월에 토양개량제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규산질, 석회질(석회고토, 패화석)
- **대상지역** 2020년 공급 읍·면·동

ⓘ **유의사항** 과잉신청후 미사용의사 표시 하지 않고 포기시 차년도 지원물량 감소 등 패널티 부과



*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